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다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말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말라

3면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화
합의

8면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
미국 패권을 위해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2면

임박한
이란 핵합의
파기와
중동 정세

6면

위안부 합의 2년
이면합의를 폭로하지만
폐기는 하지 않는
문재인

4, 5면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6~7면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7면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패권을 위해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김영익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백악관이 대외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에 해당한다. 국가안보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외교·국방 분야의 구체적 정책들이 수정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12월 18일에 나온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권”, “주권”이라는 단어를 31번이나 썼다. 지난 9월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이어,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도전이 제기되는 “경쟁적 세계” 속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역대 미국 정부들의 국가안보전략은 입발림 소리일지라도, 강대국들의 협력으로 유지되는 국제 질서를 지켰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거추장스런 치장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 [국가안보]전략이 현실적인 까닭은 국제 정치에서 힘이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권 국가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최선의 희망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국익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경쟁자들을 국제 기구와 무역으로 끌어들이고 그들과 협력하면 그들이 우호적이고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런 가정은 틀렸음이 드러났다.”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미국의 기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충돌도 불가피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지난 정부들, 특히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이 물러터졌다고 인식하며 자국 패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그 누구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세를 펼 것을 공언한 트럼프

든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주요한 경쟁자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어긋나게 세계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한 것이다.

트럼프는 국가안보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 좋은 삶든 – 우리가 경쟁의 새 시대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 가치, 부에 도전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 강대국들에 직면해 있다.”

본문에는 이런 언급도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하려 한다. ... 중국은 우리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자금으로 유능한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

물론 역대 미국 정부들도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만한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 왔다. 그러나 이토록 노골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국가안보전략)이 처음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주요 경쟁자로 묶어 놓고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한 것은 트럼프의 평소 행동과는 다소 어긋난다.

이 점은 국가안보전략이 트럼프의 이데올로기적 측근들만이 관여한 작품이 아님을 반영하는 듯하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쉬 로진은 정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전략이 순전히 “미국 우선주의”로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피터 나바로 같은) 경제적 애국주의자들

과 신보수주의자들까지 망라된 백악관 안보 담당자들 사이의 합의된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각자의 이유는 좀 다르더라도, 중국을 전보다 더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는 데 백악관 인사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래서 앞서 트럼프 측근인 스티브 배넌은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의 “속국”처럼 돼 버린 미국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경제와 외교 면에서 여러 악의적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의 확장이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에서도 기존 (미국에 유리한) 질서를 위협한다고 규정했다. 그 외에도 중국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사이

버를 이용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존재로도 묘사하며 다뤘다.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지위의 상대적 하락과 나머지 부상 속에서 세계 질서가 변해왔음을 반영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동시에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다양한 도전에 맞서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힘을 동원해 누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역사에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늘 있었고, 경쟁에서 성공한 미국이야말로 갈등과 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는 트럼프가 가리키는 방향이 평화와는 정반대임을 알려 준다. 제국주의적 경쟁의 격화 속에 트럼프의 공세는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더 불안정해지는 한반도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러시아, 이슬람주의 조직과 함께 역시나 북한·이란 같은 이른바 “불량 국가”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상세하게 거론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다층 방어체제를 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MD 능력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다음 구절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긴장 고조를 두려워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적을 억제하는 데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압력을 가중하기 위해 현존 및 새로운 경제 대책을 사용하고 국제 행위자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만한 자금을 차단하는 것도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앞으로 대북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제재 강화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벌어질 여지도 커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적 유인책과 불이익, 심지어 군사적 위협까지 암시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안보 의제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각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지배에 대응해 집단적 대응을 이끌어 내는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중

국의 부상에 불안해 하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파고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더 많은 협력과 책임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중국한테 경제 보복을 당한 한국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고 더 채근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미 ‘3불 선언’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에게 MD 구축을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드 배치 용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친제국주의적 선택을 할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로 말미암아 우파가 재기한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 진보·좌파가 “무리한 요구를 해 대서”가 아님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스라엘과 시온주의 비판 기사들

- 이스라엘 반대가 유대인 배척일까?
-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시온주의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중국 제국주의의 신장 위구르 탄압

★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③
오늘날 민족주의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현대차 촉탁계약직 해고자 박정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은 정규직 전환해야 합니다”

★ 현대차지부 임단협 합의 부결과 “새로운 파업 전술”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항의에 나선 서울의료원 노동자들
인원 충원 없는 연차 의무 사용 반대한다

★ 대학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 하라

★ 인터넷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인력 총원 없이 노동시간만 줄이고 기존 업무를 더 짧은 시간 동안 다하라는 신세계-이마트, 월급 총액으로는 노동자에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가 태스크 포스(이전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적거나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와 정부 측 전문가들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자고 제시했다.

둘째, 일부 임금 항목들의 산입 범위 조정을 위해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들도 매월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법 제도를 개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셋째, 그 밖에 업종별·연령별 차등 적용도 여전한 쟁점이다. 사용자들은 업종별 차등과 일부 연령별 차등(노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전문가TF가 내놓은 권고안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는 노골적인 개악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 온 방향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은 이미 10월 말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노동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는 사실상 최

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유사한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 시간을 줄여(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한 것도 이런 문제를 잘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치 인상”이라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갖가지 꼼수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실상 뒤흔집기에 나섰다. 이는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처지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부가 최저임금 무력화를 추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별 사용자들의 꼼수와 공격도 난무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기존의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녹여 기본급화하거나 그 명칭만 바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고정OT(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줄이는 등의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이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외피를 쓰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사측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실상은 시급은 오르지만 월급 총액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 소정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게다가 사측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도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이마트 노동자들

은 자발적인 팻말 시위를 벌이고 항의 행동을 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선업 등 위기가 심각한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사측은 경영 위기 등을 빌미로 2년치 임금 동결뿐 아니라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간식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문재인은 노동계를 향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조차 무력화하려 하고 근로기준법 개악까지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믿고 힘을 실었다가는 제 발등 찍기 십상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 정책에서 거듭 실패 안기는 문재인 “청와대 둘러리 행사를 치장”한 노동조합 지도자들 유감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김송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본의 사과가 ‘불가역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역지를 부리며 외교부의 이의를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항후 국제 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근거로 외교부더러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아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면 합의에서는 일본이 요구한 민감한 문제들을 사실상 수용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 ‘성노예’ 용어를 자제할 것,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것 등이 그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버텨야 살아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미철의 ‘위안부’ 문제를 과거 속에 묻어 버리려는 일본의 추악한 시도에 장단을 맞췄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이번 발표가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후안무치하게 반발했다.

특히, 홍준표는 TF 발표를 앞두고 보란 듯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공동으로 대응할 한미일 핵동맹” 같은 끔찍한 소리를 해했다.

자유한국당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결론은 너무 미약하다.

오히려 이번 검토 결과가 “정부 정책과는 별개”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TF 발표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결론은 너무 미약하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 다면서도 합의 폐기를 말하지 않았다. “여러 옵션을 열어 두겠다”는 수준에서 그저 문재인이 대선 공약이었던 재검토 필요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부는 이번 검토 결과가 “정부 정책과는 별개”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월 19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TF의 검토 결과는 민간 차원의 평가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관련 논의를 팽창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베는 일본의 팽창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착실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내세웠었다.

강경화 장관은 더 나아가, 26일 TF 발표의 대략적 내용을 미리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환영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호주·인도를 묶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에 동조한다



평균 나이 90세인 피해자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는 뜻이다. ‘일본과 군사 동맹은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3불’ 기조와도 모순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를 분리하자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표방한다. 그러나 “투 트랙” 기조는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 낼 외교적 수(手)가 못 된다. 일본 입장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지장이 없는데 뭇 하러 과거사 문제에서 물러서겠나?

국내 여론 때문에, 합의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출구를 찾기 바쁜 듯하다.

한미일 동맹의 ‘걸림돌’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한·미·일 동맹 관계, 특히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포위·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한시 바빠 치워 버리고 싶은 걸림돌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국내 불만 여론이 커질 때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대변해 일본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차 더 큰 군사적 영향력을 원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범죄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다.

미국은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상 주로 한국 정부를 향해 양보 압박을 가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한국보다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 자신들이 “간절히 구실”을 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의 선택

이처럼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지 한·일 양국간의 외교 사안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제국주의적 압력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단지 강요받은 것만은 아니다. 나를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투 트랙”은 골치 아픈 과거사 문제로부터 안보·경제 협력 문제를 분리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으로 나아갈 문을 스스로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협력자 구실을 자처하는 한,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국주의 질서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국가의 한계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도 사드 배치 문제처럼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다. 이전 정권의 책임은 물론면서도 실제로는 ‘위안부’ 합의를 물리지 못한 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책임 묻기와 배상으로 남은 서른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한을 풀어 드리고, 또 다른 전쟁 범죄를 향해 나아가려는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의 대표적 죄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김영익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항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본지 164호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관계 있다’)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몇 달 뒤 퇴진 촛불이 등장한 이유의 하나가 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커녕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조차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지 않다.

9월 러시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청와대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침략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경제·안보 관계의 진전을 분리(이른바 ‘투 트랙’)하려고 한다. 무게 중심은 후자에 있다.

‘위안부’ 문제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얽히고설킨 것이다. 해결이 어렵고 더딘 까닭이다.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일본의 제국주의적 과거 청산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1945년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한 제국주의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통념처럼 ‘민주주의 대 파시즘’의 전쟁이었다면, 전쟁의 종결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식민지 민중이 겪은 아픔을 드러내고 그 유산을 청산하는 계기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미군은 해방군으로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찰하려고 점령군으로서 동아시아에 들어왔다.

좌파 역사학자 가브리엘 콜코는 당시 미국의 전략은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미국 자본주의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1930년대 대불황과 제2차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반식민주의 반란과 민족 해방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내전이 발발해, 마오쩌둥 군대가 승리할 기세였다. 패전국 일본에서도 1945년 말 38만 명이던 노동조합원이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더 늘는 등 노조

장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



과거 정부들처럼 문재인 정부도 피해자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보다 노동 정의가 급격히 분출했다.

따라서 미국의 시급한 과제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안정시키고 반제국주의적 혁명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의 특징은 승자가 정령 지역에 자신의 체제를 이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 자본의 이익과 시장 확보를 위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려 했고, 일국 패권의 유지와 냉전 비용 절감을 위해 아시아에서 일본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고자 오랫동안 집요하게 한국과 일본에 국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런 점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일본 정책에 영향을 줬다. 우선, 미국은 일본 ‘천황’의 지위를 유지해 줬다. “소련이 주도하는 ‘전 세계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천황제 유지가 긴요하다”고 본 것이다.(《패배를 깨닫고, 존다우어, 민음사, 2009》)

가장 중요한 전범인 ‘천황’이 제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일본 구질서의 핵심이 보존될 수 있었다. 전쟁과 식민 지배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고 미국의 파트너가 됐다. 그런 인사 중에는 현 일본 총리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같은 자도 있었다.

이 점은 나치가 패배한 유럽에서도 미국·영국의 개입과 스탈린의 협조로 구질서가 재건되고 그리스·프랑스·이탈리아 등지에서 파시스트 부역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한 일과 맥락을 같이한다.(《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책갈피, 2004, 680~686쪽 참조)

미국은 일본이 식민지 민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 데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소수 개인을 제외한 전범 대부분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미군 당국은 ‘위안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했지만, 이 문제는 일본 전쟁범죄를 다른 도쿄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냉전이 본격화하자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핵심 군사 동맹국으로 세우려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은 서둘러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일본을 국제 무대에 복귀시켰다. 이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 중국 등은 아예 초대조차 국 패권의 유지와 냉전 비용 절감을 위해 아시아에서 일본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고자 오랫동안 집요하게 한국과 일본에 국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뛰어들길 원했던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식민 지배가 낳은 피해에 관한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에 합의해 줬다.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위안부’는 물론이고 강제징용·해피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라고 우길 수 있었다. 미국 의 개입 속에 한국 지배자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민중의 고통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이처럼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동맹 체제의 중심에 두는 것을 패권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 덕분에 민초부를 받은 일본 지배자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일본과 얽히고설킨 게 된 한국 지배자들도 이 문제에서 한국인의 바람을 계속 외면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제국주의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도 했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이 있는 아시아 민중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장한 한·일 국교정상화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집권 후 처음으로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위안부’ 문제가 공문화되고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진상 규명과 일본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게 된 것은 1987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폭발한 뒤였다. 특히 1991년, 김학순 씨(작고)가 처음으로 피해자로서 공개 증언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1992년 처음으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 모질·관리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일본 정부 문서가 폭로됐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의 법적 책임은 한사코 부인했다. 범죄 가해자들과 그 후예들이 일본 지배체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고, 이 자들이 1990년대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했다. 과거 제국주의 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후원하는 미국이 과거사 문제를 온전히 푸는 데 도움을 줄 리 만무했다.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개자가 아니라 책임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당사자”였다(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윤명숙, 이학사, 2015 참조). 한국 정부의 태도도 문제였다. 역대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안보 관계를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시했다. 그래서 한사코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러다가 일본 우익이 망동을 부리거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 한국 정부는 뭔가 하는 듯한 제스처만 취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이런 견해를 계속 외면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양국 정부 간에 국제법상 권리·의무는 일단락된 사항이므로 정부 차원에서는 대일 보상 제기가 불가하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국이 관장한 한·일 국교정상화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집권 후 처음으로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2004년 당시 대통령 노무현

도 일본 총리 고이즈미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내 임기 동안에는 정부 차원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듬해 일본이 독도 문제로 도발해 오자, 노무현은 다시 태도를 바꿔 일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965년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 밝힌 것 외에 실질적 조치를 취한 건 없었다(윤명숙, 같은 책 참조).

이렇듯 정부도 처음에는 이전 정부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2011년 현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이라고 판결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측구 속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폭로돼,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그런 가운데 한·일 간에 ‘위안부’ 외교 회담이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은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 개선이 지체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적극 관여해 한·일 양 측에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 압력의 주된 방향은 한국을 향했다.

2015년 2월 웬디 셔먼 당시 미국 국무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이른바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다투고 있다. … 물론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 지도자든 과거의 죄를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같은 해 4월 8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애쉬턴 카터도 같은 얘기를 했다. “[한·일 간] 협력이 의한 잠재적 이익이 과거에 있었던 긴장이나 지금의 처치 상황보다 중요하다. … 우리 세 나라[한·미·일]는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미국이 가장 크게 환영했던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국의 관장하에 나온 약속이라는 점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문제와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보여 준다.

‘위안부’ 문제의 이런 측면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심지어 미국의 중재) 기다렸으나, 세계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미국·일본과 여러 면에서 얽혀 있는 한국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래로부터 찾아야 한다. 특히, 한·미·일 지배자들이 가리키는 “미래”를 거부하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다른 미래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와 중동

2018년 1월,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김종환

12월 15일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겨냥해 채프·플래어(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용도의 금속조각·불꽃)를 위협용으로 발사했다. 이 “공격적인 작전”을 합리화하고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지정된 비행 구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미군이아말로 초대받지 않은 군대로 시리아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6년 남짓 자국민 5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시리아 독재자(아사드)의 퇴진에 별로 관심이 없다. 대신에 이란이 이 일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크게 경계한다. 이란이 ‘핵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며 말이다.

다음달인 2018년 1월이면 트럼프가 핵합의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대(對)이

란 제재 중단에 관한 미국의 각종 법률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2018년 1월이 그 시점이다. 그때, 2016년 1월 이후 중단했던 제재를 재개한다면 미국은 핵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커다란 파장을 낳을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일단 의회와 동맹의 지지를 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 핵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단서를 달면서 말이다. 의회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데서 보듯 미국 지배자들의 의견은 통일돼 있지 않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 파기를 강행하면 중동에 다시 한 번 큰 충격이 밀려올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의 혼란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

레바논, UAE 한국군 즉각 철군하라!

한국군은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병해 있다. 두 부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12월 초 다수 여야 국회의원들은 파병 연장에 찬성했고 결국 통과됐다. 세계 자본주의 내에서 한국 국가의 국익을 강화하기를 택한 것이다.

정의당 의원들과 민중당 의원들은 UAE 파병에는 모두 반대했으나 레바논 파병에서는 같은 당 안에서도 표결이 엇갈려 윤소하(정의당)와 김종훈(민중당) 의원만이 반대했다. 나머지는 기권 혹은 찬성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란에 호전적인 대표적 걸프 왕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UAE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킬 기회가 왔다고 열을 올리는 사이 우리 나라 청년 수백 명은 갑수폭 전쟁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레바논과 UAE에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키라!

트럼프의 중동 구상, 세계적 맥락 속에서 보기

트럼프는 왜 이렇게 막 나갈까?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예루살렘 선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험적 외교·전쟁 도발 지원 등은 제국주의, 즉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세계 열강 중 그 영향력이 명실상부하게 전지구적인 국가이지만, 지난 몇십 년에 걸쳐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해 온 바람에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과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을 늘 의식해야 한다.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벌이는 군사 행동은 그 일환이다. “거대한 체스판”은 미국 지배자들의 그런 사고

방식을 잘 보여 주는 말이다.

중동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매장지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유라시아) 요충지다.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이하 ‘전략’)은 ‘군대가 뒷받침돼야 외교가 힘을 발휘한다’고 선언했다.

중동이 이를 확인하는 적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에서 중동이 지니는 중요성은 최근 트럼프가 “인도-태평양”을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강조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양은 바로 남중국해와 중동을 잇는 바다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며 중동 해상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좌

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동은 미국이 유럽의 동맹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번 ‘전략’에는, 전통적 우방인 독일과 프랑스도 심각한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특히 그들이 유럽연합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트럼프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 미국 주도 군사 동맹을 위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라는 내용은 가득한 반면, 유럽 통합이나 유럽연합을 지지한다는 말은 전무하다.

그런데 최근의 난민 위기에서 보듯 유럽은 중동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중동에서 독자적 군사 개입을

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예루살렘 선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카타르 단교 선언 지지 등은 그간 프랑스, 독일, 영국이 중동에서 해 온 노력을 상쇄하는 면이 크다.

트럼프가 야심차고 호전적인 현지 지도자들을 이끌며 연거푸 중동을 뒤흔드는 것을 보며 유럽 지배자들은 군사력 열세가 외교력 열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동이 거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집권했다. 지난 몇 년간 중동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실패, 아랍혁명과 반혁명을 배경으로 시리아에서 이라크 서부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

에 국가 권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를 이용해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자 미국의 포퓰리스트 우익은 개입이 충분치 않은 탓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트럼프는 전임 정부의 ‘유약함’(이라크·시리아를 수없이 폭격했는데도)을 비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중동의 혼란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

미국의 이런 세계적 구상과 중동 현지 지배자들의 지역 패권에 대한 야심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동은 향후 더 큰 격랑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울산 토론회

노동자와 성소수자가 어우러진 토론

12월 23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가 개최한 공개모임 ‘성소수자 아들을 둔 노동자 아빠 이야기 — 성소수자 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이 열렸다. 최근 울산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들의 집회·행진인 ‘퀴어라이프 인 울산’이 열렸고, 여기에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자 회원들도 적극 참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어떻게 맞설지, 민주노동조합 화물연대 조합원이자 성소수자 부모모임 회원인 권영한 동지를 통해 생생하게 들어보려 한 것이다. 노동자연대 성소수자팀의 성지현 동지도 발표했다.

공개모임에는 20명이 넘는 노동자·청년·학생이 모여 열띤 토론했다. 성소수자와 지지자가 함께 토론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도 참가했다.

권영한 동지는 발표에서 우선 우파들의 성소수자 공격을 반박했다.

“[성소수자는] 질병이 아니라 단지 성적 지향일 뿐입니다. ‘전환 치료’를 한다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를 이성애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울증과 자살을 낳기만 했습니다. 성소수자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권영한 동지는 성소수자 부모모임 초창기 활동가로서 부모가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자존감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많은 활동을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힘든 점들,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를 전국 각지를 돌며 토론했습니다. 부모모임에 나오는 부모들은 ‘내 새끼가 핍박받는 게 싫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귀걸이를 좀 줄일 수 없냐’, ‘바지 좀 길게 입으면 안 되냐’ 등 잔소리를 하며 아들을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봐야 해요. 저는 제 아들이 당당합니다. 아들의 애인을 직접 찾아 가서 밥도 사 주고 웃도 사 줬죠. 아들에게 관계에 대한 조언도 해 줬어요. 또 저는 친척, 친구 등 모두에

게 뽕뽕이 아들이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권영한 동지의 진솔한 경험담과 그가 준비해 보여 준 영상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부모들이 성소수자들을 꼭 안아 주는 ‘프리허그’ 동영상을 보던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청중 토론에서 한 성소수자가 말했듯이, 성소수자들에겐 가족은 종종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가장 두려운 대상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부모인 권영한 동지의 경험과 부모모임의 활동은 그 자체로 감동이 었다.

권영한 동지는 운동의 발전을 위한 문제의식도 말했다. “부모모임의 부모

님들은 아주 소박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죠. 그렇지만 미국 대사관의 후원을 받는 건 오히려 운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권영한 동지가 얼마 전 <노동자 연대> 신문에 기고한 글(본지 233호 ‘성소수자 자식을 둔 노동자 부모가 말한다 —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에서 밝혔듯이, “그들[자본과 제국주의 국가]이 돈을 후원해 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성소수자 친화적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거나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한다. 성소수자 운동은 이런 ‘핑크워싱’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어서 성지현 동지가 발표했다. 그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김문성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스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스의 핵심 해외 법인들의 소유자 명의를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임이 드러났다. 제2의 다스로 불리는 이시형의 회사 에스엠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2008년 BBK 특별검사였던 정호영은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건을 경리 담당 여직원 1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 이 ‘횡령범’ 여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정호영 특검 자체도 재수사 대상이다.

다스 수사의 다른 한 축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속이고 돈을 챙긴 BBK 사기 사건의 재수사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 의혹은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며, 그가 사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BBK가 날린 다스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의 힘을 동원했는지(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부패의 화신 이명박이 활보하는데 적폐 청산 마무리는 가당찮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이다. 나머지 혐의들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이명박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늦었기 때문이다. 2008년 BBK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처럼 비리 의혹에 오히려 면죄부만 줄까 봐 대중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명박 수사가 닦은 울렸지만, 시작부터 시간에 쫓기게 된 상황은 새 정부의 새누리당 정권 적폐 수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촛불의焰원은 훨씬 더 강력한 처벌과 청산이다.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문재인은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겠지

만, 지배계급의 단합과 기득권 질서에 너무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압력도 크다. 기업주들도 조중동 등을 통해 연일 적폐 청산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식 몽니는 이에 편승한 것이다.

이미 검사장급 검사가 자살로까지 항의를 표했고, 얼마 뒤 검찰총장 문무일은 적폐 수사를 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에서도 적폐 청산에 더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판결이 늘었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 심리전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임관빈 등이 구속적부심을

로 죄다 석방됐다. 비록 둘 다 같은 판사의 판결이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결국 우병우가 구속됐다. 우병우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관진 등을 풀어준) 담당 판사 신광렬은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맡겨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결국 변경됐다.)

아마 지배계급의 위신을 땅에 처박게 한 박근혜의 측근 일당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지배계급 다수의 뜻인 듯하다.

사법부는 기업주들과 부패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다시 양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홍준표, 벅슨 김정

주, 검사 진경준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 반면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은 박탈했다.

검찰의 반(反)노동자 DNA도 여전하다. 검찰(대구)은 12월 22일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측을 불기소처분했다.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비정규직 178명의 직고용을 명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과거 청산에서 ‘민생’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 물론 이때 ‘민생’은 노동자·서민의 생계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윤을 뜻한다. 적폐 청산 악화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와 병행한다.

물론 현 여권 입장에서 이명박 수사는 정적 견제용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단번에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도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개혁이 흐지부지돼 지지율이 떨어지면 구 여권 숙청 재개로 지지 만회를 꾀하곤 했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대중 저항에 밀리자 김영삼은 이 피문은 독재자들을 내란 범죄자로 구속했다.

노동운동은 적폐 청산을 지배계급 내부 거대로 전략시키지 말라고 규탄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성군 위원장 등 사면 회피 등 노동 적폐가 불충분하게 청산되거나 유지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는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자본주의 가족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이 노동력 재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가족 제도를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가족 제도 바깥의 존재들인 성매매 여성과 동성애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차별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고, 또 자본주의는 착취를 위해 차별을 공고히 하는 만큼, 이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자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가능성

청중 토론 시간에는 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이 진지한 주장과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나눴다.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올해 6월 울산에서 기독교 우파들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 폐기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고, 그 조항 폐기 법안을 발의한 울산 지역구 윤종오, 김종훈 진보 국회의원

들을 압박했던 것을 비판했다.

권영한 동지의 오랜 친구이자 울산의 석유화학업체 SK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야간 노동을 가기 전 시간을 내서 참가했다. 그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영한 동지를 응원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현장에서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퍼뜨리는 직장 동료와 논쟁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이제는 더 확실한 논리로 논쟁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 그는 성소수자 운동의 과제가 무엇이고,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다른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발표를 듣고 자기 가족이 성소수자라고 밝혀도 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한 문제의식도 던졌다. 그는 난생 처음 참가한 성소수자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튀는’ 복장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으며, 평범한 노동



토론회가 끝난 뒤 발표자·참가자들이 땀말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자들이 성소수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물었다.

한 성소수자 참가자가 1950년대 미국 성소수자 운동의 경험을 말하며 이에 답했다. “당시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가 사회 규범과 어긋나지 않음을 인정받고 싶어서 억지로 성별 규범에 맞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위축

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복장은 그의 온전한 자유이고, 복장이 어떻게 상관 없이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요구와 구호를 중심으로 함께 저항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목사인 나이가 지긋한 참가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기독교 우파를 비판했다. “요즘 기독교계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혐오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들이 말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하 성소수자 운동의 과제를 둘러싼 대화도 오고 갔다. 자유한국당 같은 적폐 세력들이 동성애 정점으로 우파를 결집시키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 문제에서 불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 독립적으로 아래로부터 저항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에서도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가한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말은 노동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만날 가능성을 보여 줬다.

“노동자가 왜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함께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고 어떤 것을 함께 싸워 쟁취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김지태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이정원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2020년에야 대상이 되는 노동자도 있다.

인천공항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점에 비춰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결과다. 인천공항처럼 대규모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이 이 정도라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은 직접 고용과 처우개선 수준을 더 낮추려 들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논평에서 “완전한 정규직 전환에 미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도 “절반의 성공, 절반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절반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개월을 끝어온 협상 과정에서 실망이 컸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본지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합의안의 문제는 이렇다.

첫째, 직접 고용 비중이 30퍼센트에 그쳤다. (애초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854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늘었지만 말이다.) 나머지 다수는 자회사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애초 인천공항 사측이 ‘생명안전업무’라며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던 셔틀버스, 전기, 운항시설 등의 업무가 최종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니 해당 노동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이다.

직접 고용되는 분야로 꼽힌 보안검색·방재 업무에서도 일부만 직접 고용되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고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직접 고용과 자회사로 갈려 단결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토목지회 한 조합원은 “노조가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둘째, 처우 개선도 최소화 수준에 그칠 것이 뻔하다.

구체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은 앞으로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러면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합의 직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추가 부담은 없으며 기존 용역 회사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들도 별도 직

군으로 채용되는 것이라, 사실상 무기계약직이거나 ‘2등 정규직’이 돼 차별이 유지된다. 일부 은행들에서 별도 직군으로 ‘정규직화’한 뒤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온전히 지켜지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 구성으로 자회사 노조와의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끝내 자회사 노조와의 교섭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정식 교섭이 아닌 협의체로 모회사의 책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철도 자회사 노조들의 사례를 봐도, 공사 측은 자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도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자회사 경영진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동안 정규직 업무를 떼어 내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이 추진돼 왔고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돼 온 점을 보면, 고용 안정 보장과 지속적인 처우 개선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환이 늦어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직접 고용 전환자들의 채용 심사(비관리직은 면접과 적격심사, 관리직은 경쟁 채용) 과정에서 일부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노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아쉬움

일부 노동자들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했다. “전원 직접 고용을 내걸고 일찌감치 투쟁했어야 했다”, “노조 간부 소수가 국회 등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싸워야 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전문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직접 쟁”겨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만, 정작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교섭 역량’이 아니라 사측을 강제할 조합원들의 집단적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가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을 때, 조합원들은 적극 호응했고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 속에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1200여 명이나 될 정도로 조직도 확대돼 기세도 좋았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등의 지도부는 이런 힘을 결집해 투쟁을 키우기보다, 협상에 매달리다 “자회사 최소화” 등으로 미끄러졌다.

노동운동의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자회사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전원 직접고용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요구 후퇴를 부채질한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3600명의 자회사 고용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 전문가 뭉으로 참가해 함께 이 합의안을 끌어낸 것이 그런 사례다.

인천공항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인천공항 합의 소식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에도 별도 직군과 자회사 방안 등의 수용을 종용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도 우려된다.

합의안이 나왔지만,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월 초에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찬반투표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임금체계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채용 방식 등의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 정도에 따라 향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노동자들의 실망을 키우는 상황에서 저항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네트미디어) : 국민은행 02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